

北 미사일 발사

한반도 위기 이번주 고비

北, 6자회담 복귀나 美, 강경제재나

오늘 안보리표결·내일 남북장관급회담
北 태도변화 이끌어낼지 귀추 주목



한국을 방문중인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9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을 만난 뒤 장관실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반응따라 추가 협의 필요”

‘미사일 특사’ 힐 차관보 2박3일 방한 일정 마쳐
“한·미 한목소리 중요”...대북제재 등 시각차 조율

“상정할 수 있는 모든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2박3일간의 서울 방문이 끝난 9일 정부 당국자는 이른바 ‘미사일 국면’을 맞아 한·미 한목소리 중요...대북제재 등 시각차 조율

관보의 발언으로 요약됐다. 이 발언 속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조치를 놓고 그동안 표출했던 미묘한 시각차가 어느정도 정리됐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가 이 장관과의 면담이 끝난 뒤 “한국은 대북지원을 검토해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차라 힐 차관보는 미국의 정책방향을 4개국에 두루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1차적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조치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 제재, 미국과 관련국이 협의해서 추진할 조치, 미국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등이 폭넓게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조치로는 ▲남북 장관급 회담 재개 ▲대북 경제지원 재검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등에 대한 조정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북한이 한국정부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경우 향후 남북체널을 유지해야 하는 지를 놓고 추가적인 한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사일이나 핵 관련 물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의 동행상 이동을 차단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한 봉쇄작전도 검토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상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권오규 경제팀 18~20일부터 가동

12,13일 국회 청문회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새 경제팀이 18~20일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권 부총리 후보자와 전교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2,13일 열고 14일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의 임명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18~19일께 권 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무위원 내정자들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2월에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등은 국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 다음날인 10일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취임했다.
이번의 경우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관

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 부총리 후보자가 취임하면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을 포함한 정부의 새 경제팀이 진용을 갖추게 된다.
다만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19일로 잡혀 있어 청와대가 두 부총리 후보자를 같은 날 임명하고자 하면 권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취임이 20일께로 조금 늦춰질 수도 있다.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이미 확정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바탕으로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한편 권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임시 사무실을 정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통령에 여성 부총리 추천했다
협상 불리하면 FTA 중단 가능”

한명숙 총리 방출출연



한명숙 총리는 9일 지난 7·3 개각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여성 부총리를 천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방영된 SBS ‘한수진의 선데이 토크’에 출연, “(여성총리로서) 여성을 내각에 들여보내는 부분을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부총리 문제를) 대통령과 의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개각 당시 제정권 행사 여부에 대해 “개각 전부터 제정권을 확실히 행사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으며, 실제로 오래 전부터 대통령과 긴밀한 협의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코드개각’ 논란과 관련, 한 총리는 “(국민들의) 선출을 통해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뜻과 비전, 정책에 있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서 정책을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고 책임지는 것”이라며 “이번 측면에서 볼 때 뜻과 의지와 비전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총리는 5·3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분을 특별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에서 갈등이 뒤따르기 마련이지만, 시급히 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면서 협상이 불리하다면 중단할 수 있는지에 질문에 대해 “그렇다. 그건 너무나 분명하다”고 답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KT Campus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red exclamation mark with the text 'KT 캠퍼스' and 'KT 캠퍼스' repeated. Below the exclamation mark, there is a group of students celebrating. The text includes 'KT 캠퍼스' and 'KT 캠퍼스' repeated. At the bottom, there is a phone number '문의: 080-737-5555'.